NO. 01
발간일 2020. 07. 30.

Gangwon Urban Regeneration Policy Brief

강원도 도시재생 정책 브리프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880 담당부서 | 정책연구팀 033-250-2977

코로나19와 팬데믹!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강원도 도시재생

함 광 민 정책연구 팀장

목 차

1. 코로나19 확산과 팬데믹 여파
2.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주요 조치와 강원도 동향
3. 정부 및 강원도 도시재생의 여건변화
4. 포스트코로나와 강원도 도시재생 시사점

주요내용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2만 여명에 달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WHO)는 전염병 위험 최고 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강원도는 집단감염 발생을 대비한 대응전담팀 설치·운영과 각종 행사 취소, 코로나19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도 내 감염병 확산 차단과 함께 도민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하지만, 주민 간 협의와 화합을 이끌어 가야하는 도시재생 관계자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주도의 사업발굴·운영이 불가피한 점과 지자체의 사전준비 미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에 예정돼있던 도시재생 신규공모사업을 연기하였고,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제는 기존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원도는 다수의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연기 혹은 취소해야만 했다. 그로 인해 올해 6월에만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51건, 사업추진 운영 63건, 교육·홍보 운영 60건이 예정돼있으며, 이 모든 업무를 소화해야 올해 강원도 도시재생 목표 달성에 근접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도시재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며,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성장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스마트도시재생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영역과 연계할 수 있는 '강원도판 도시재생 뉴딜'로의 전환 태세를 강구해야한다.

강원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gwurc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Gangwon Urban Regeneration Center

1. 코로나19 확산과 팬데믹 여파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근접한 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 북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

- 전 세계 확진자가 12만 여명에 달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위험 최고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였음
- 2020년 5월 25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미국이 가장 많은 168만 여명으로 전 세계 확진자의 30%를 차지하였고, 브라질 36만 여명, 러시아 34만 여명, 스페인 28만 여명, 영국 26만 여명의 순으로 나타남
-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스페인, 아시아에서는 이란과 중국, 남미에서는 브라질,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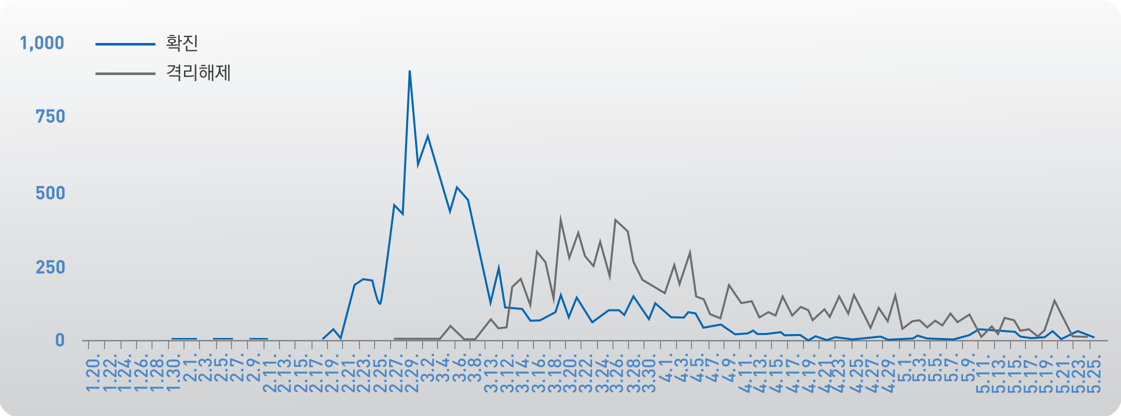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월 18일 31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급증한 후 3월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나, 6월부터 확진자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월 29일(9시 기준)을 기점으로 피크아웃 현상을 나타냄
- 3월 13일부터 격리 해제자 수(177명)가 신규 확진자 수(110명)를 넘어서면서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임
- 5월 25일(0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206명이며, 그 중 내국인 확진자 비율은 88.2%를 차지함(해외유입 1,215명)
- 6월 28일(0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2,715명, 격리해제는 11,364명, 신규 확진자는 62명에 달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질서, 세계경제, 생활양식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 양상과 新정책대안이 제시됨

- 특히, 도시 봉쇄조치와 각종 모임·회의 취소, 외출삼가 등에 따른 비대면 문화 형성과 정보통신 기술(ICT)의 부각으로 도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

<그림1> 국내 일일 신규 확진·격리 해제자 현황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자료를 편집(배포일: 20.05.25)

2.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주요조치와 강원도 동향

1) 코로나19 관련, 정부 주요 지침

정부는 2월 23일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개학 연기와 마스크 5부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시행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함

- 전국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개학을 4차례 연기한 후 순차적으로 개학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학생들이 나타나 등교 중지하는 학교들이 나타남
- 종교시설과 체육시설(무도장, 체육도장 등), 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차원에서 4월1일(0시)부터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로부터 14일 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함
-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 신고제를 운영함

<표 1>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앙정부 주요 조치

일시	주요 조치
2020. 2. 23	·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최고 수준)’단계로 격상 · 전국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개학 연기
2020. 3. 6	·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마스크 5부제’ 시행
2020. 3. 15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0. 3. 19	· 입국 관리(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감염병 유입 차단
2020. 3. 22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인 시행 권고
2020. 4. 1	·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2020. 4. 20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방역체계 전환
2020. 5. 4	· 정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020. 5. 6	· ‘생활 속 거리두기’로 생활방역체계 전환
2020. 6. 26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고 운영
2020. 7. 6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020. 7. 10	· 휴관 중인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 자료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강원도, 코로나19 동향과 여파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10일 뒤 신규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됐으나, 이후 빠른 감소세를 보임

- 6월 20일(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62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3명, 퇴원자가 52명으로 현재 7명의 확진자가 도 내 국가감염병 전담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 시군별로 보면, 원주가 2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춘천과 강릉, 철원이 10명으로 동일하게 발생함
- 도 내에서는 동해와 홍천, 평창, 정선, 화천, 양구, 고성 등 1시 6군에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1)]

전국대비 강원도 확진자 비율은 0.5%로, 광역자치단체 규모 중 8번째로 낮게 나타남

-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타난 지역은 대구(6,895명)이며, 경북(1,384명) 서울(1,202명), 경기(1,107명) 순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비율이 67%를 차지하며, 종교 관련 집단 발병으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 [2)]

3) 강원도 주요조치 및 사회변화 [3)]

강원도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긴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정부 방역대책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및 시민 혼란을 최소화

- 도 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2일, 강원도는 확진자와 접촉한 285명에게 자가격리를 요청하고 일대일 모니터링을 실시함
- 도 내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1,095곳 운영 중단 및 폐쇄조치함(20.2.24)
- '클린 강원 만들기' 범도민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도 내 공무원,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단체 및 협회 등 최대 5만 6천여 명이 도 전역에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함(20.3.8)
- '강원도 비상경제 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도민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2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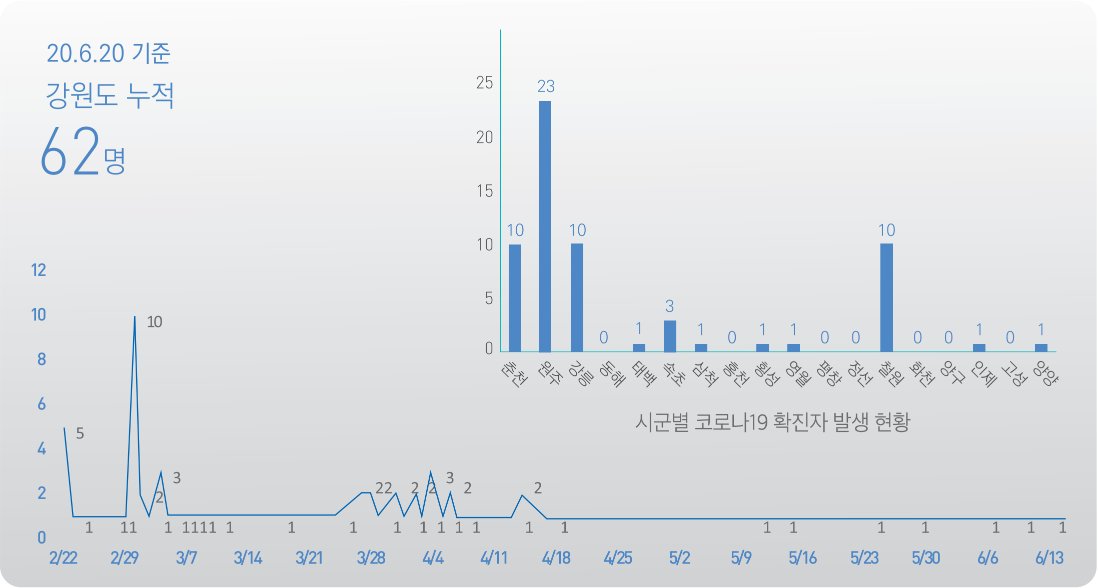
강원도 내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 막중

- 가족을 동반한 신병 입소식 및 수료식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접경지역 내 음식·숙박업 등 매출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함
- 도 내 50개 예식장과 호텔 등 4월까지 예약이 취소·연기됨(20.2.24)
- 도 내 시외버스 노선 축소로 인해 버스업체 수익금이 133억 감소함(20.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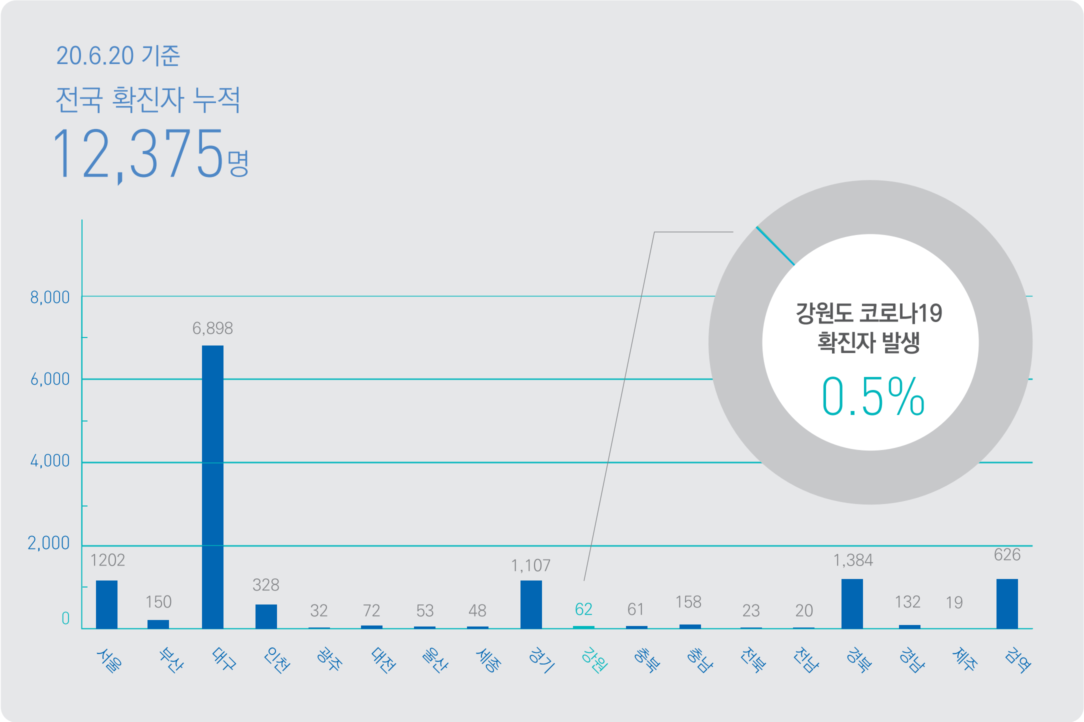
1) 7월 31일 기준,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동해, 홍천, 정선, 화천, 양구, 고성 등 1시 5군이며, 확진자가 완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지역은 삼척, 철원, 인제, 양양 등 1시 3군으로 확인됨
2)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검색일: 2020.5.25)
3) 강원도청, 강원일보 보도자료를 참조

<그림2>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 자료 : 강원도청 보건정책과 자료를 편집

<그림3>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편집

3. 정부 및 강원도 도시재생의 여건변화

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관련 주요 조치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2020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일정 변경

- 국토교통부는 주민주도의 사업발굴 및 운영이 불가피한 점, 지자체의 사전준비 미흡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재생사업 등, 신규공모사업을 연기함

도시재생 관련 행사 연기 및 프로그램 변경

- 6월 개최예정이었던 '2020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를 연기하고, 도시재생뉴딜 청년 인턴 발대식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함

<표 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관련 주요 조치

일시	주요 조치
2020. 3. 25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선정 일정 변경(3주간 연기)** - 주민협의체 운영 등이 곤란하여 공모 사전 준비에 문제가 생기는 지자체가 증가함에 따라 접수 마감일을 연기
2020. 3. 30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일정 변경(2주간 연기)** -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있어 주민과 지자체의 회합이 어렵고, 향후 대면 평가 시에도 문제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기
2020. 4. 7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일정 변경(2개월 연기)** - 지자체 사전준비 미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수 마감일 및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심사 일정 연기
2020. 4. 27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일정 변경(2개월 연기)** -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정부방침에 협조하고자 개최 일정 연기
2020. 6. 1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발대식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 '20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들은 10개 권역별 교육장소에 분산되어 비대면 화상 발대식에 참석

※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코로나19의 강원도 도시재생 영향력

코로나19가 강원도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 강원도 내 도시재생광역·기초·현장지원센터 29개소(19년 3월 기준)를 대상으로, 3월과 5월 총 2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내용은 도시재생 『거버넌스』, 『사업추진』, 『교육·홍보』와 관련하여 완료·연기·취소·예정된 업무 건 수와 지역사회의 변화된 양상을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음
- 참고로 올해 상반기 동안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년 1월부터 6월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旣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집행과 도시재생 관련 신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는 거버넌스 운영과 사업추진, 교육홍보 활동이 불가피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및 취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표 3> 강원도 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연기·취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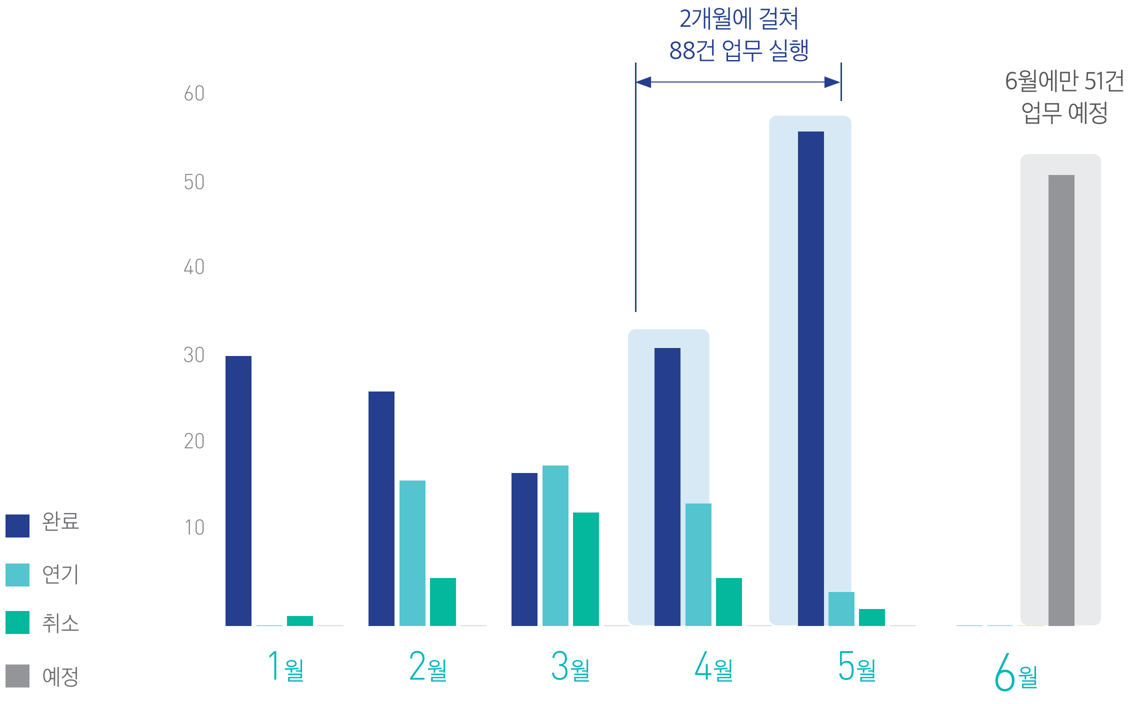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거버넌스 운영 관련	- 주민협의체 임시·정기총회 및 간담회(공통) - 강원도시농업 사회적 협동조합 업무협약식(춘천 기초) - 고등학교 도시재생 동아리 지원(원주 기초) - 강릉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강릉시 중앙동) - 도시재생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실무자 회의(동해 동호지구) - 태백교육지원청 청소년담당장학사 미팅(태백 기초+장성) 등
사업추진 관련	- 향교 지방선비 양성사업 설문조사(춘천 교동) - 학성동 희망촌 콘텐츠 개발 및 기록화 사업(원주 학성동) - 다문화 요리 강습(원주 우산동) - 옥천동 문화관광 디지털 로드 구축(강릉 옥천동) - 골목상권 상인요구 조사(강릉 중앙동) - 마을해설사 구축 및 운영(강릉 옥천동) - 찾아가는 유쾌한 문화노치원(강릉 옥천동) - 공동주방 레시피 사업 (동해 동호지구) 등
교육·홍보 관련	-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역량 강화 교육(공통) - 도시재생대학 기초·심화과정(공통) - 주민맞춤형 창업(바리스타·차·제과) 교육(춘천 근화소양) - 학성동 광명경로당 소책자 발간(원주 학성동) - 어르신마을학교 주민설명회(강릉 중앙동) - 탄광역사이야기 전수단(태백 기초+장성) - 별총총 주민디자인 학교(영월 기초) - 주민정원사 특강(철원 화지마을) 등

(1)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변화

주민협의체 운영과 행정지원 협의체 간담회 등, 주민주도의 상향식 도시재생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한 2월과 3월, 강원도 내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관련 회의는 각각 16건과 18건 연기됨
- 또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3월, 거버넌스 운영 관련 회의가 12건이 취소되는 등,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함
- 4~5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 시행 등, 코로나19 확산이 소강상태에 진입하면서 그간 운영하지 못했던 주민협의체 모임 등이 2개월에 걸쳐 88건이 대거 실행되면서 거버넌스의 체계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6월, 부처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회의 및 주민협의체 임시·정기 총회 등, 강원도 도시재생 거버넌스 관련 업무가 51건 예정되면서 업무처리에 큰 부담을 초래함

<그림4> 강원도 도시재생 거버넌스 관련 업무 추진현황



(2) 도시재생사업 추진 변화

강원도 도시재생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 공동체 협력 등의 지연으로 예산집행 및 사업 착·준공 시기에 차질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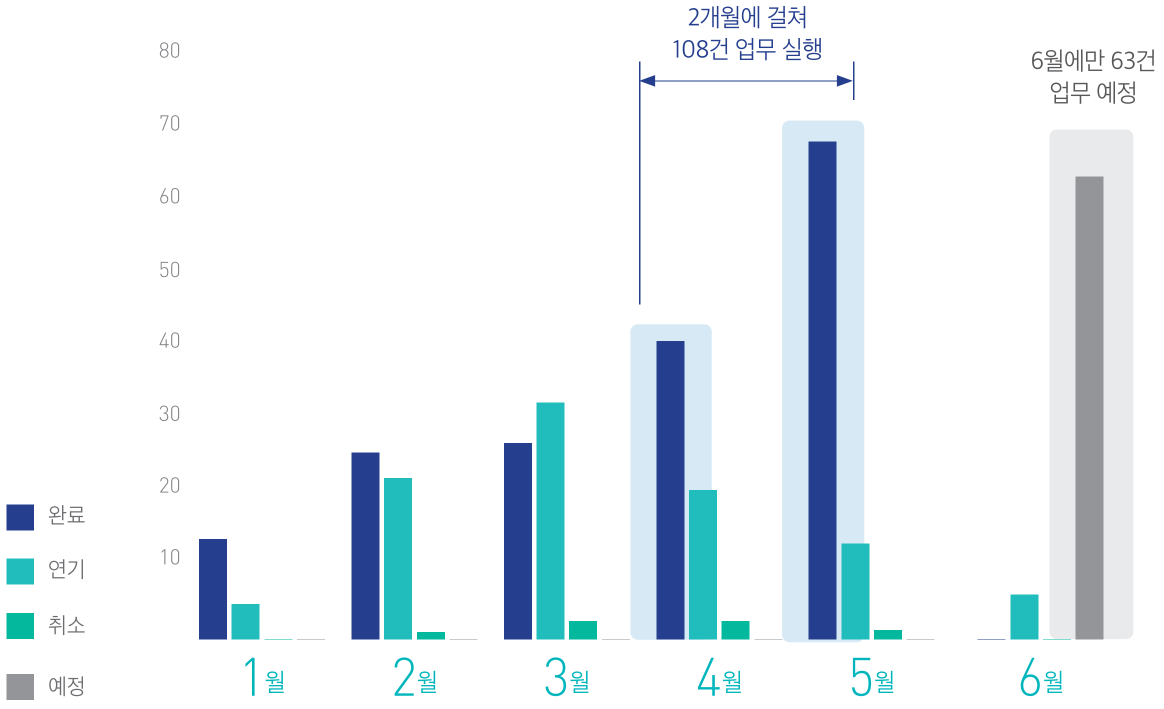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월과 3월, 강원도 내 도시재생 사업추진 관련 업무는 각각 21건과 32건이 연기되는 등 사업 집행에 차질을 빚음

- 이후, 코로나 확산이 점차 완화되면서 4월 40건, 5월 68건의 집행을 완료하고, 6월 63건이 예정되는 등 사업성과 가시화를 위해 시급한 업무 추진이 불가피함

- 연초 강원도는 '20년 말까지 52개 세부사업을 추가 착공하고 33개 세부사업을 추가 준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4)]

- 이에 단기간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업무과중과 사업의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그림5> 강원도 도시재생 사업추진 관련 업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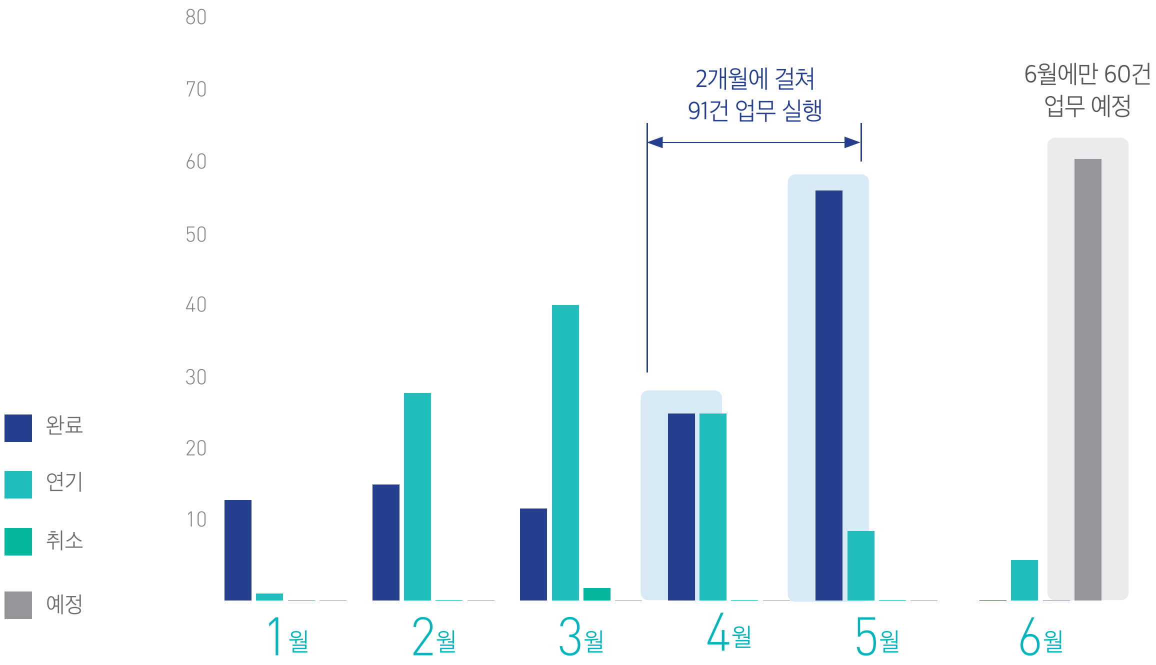
4) 강원도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시·군 간담회 회의자료, 20.1.20

(3) 도시재생 교육·홍보 운영 변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 내 도시재생 교육의 모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강원도 내 도시재생기초·현장지원센터에서 기획한 도시재생대학 및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은 총 79회[5]에 달함
- 1~2월에는 도시재생대학 소개와 수강생 모집 등의 홍보 활동이 이루어 졌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행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음
-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홍보활동을 연기한 건수는 1월 1건에 불과하였으나 2월 28건으로 급증한 후, 3월 4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반면, 완료한 건수는 3월 12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5월에는 56건 완료, 6월에는 60건이 예정되는 등, 과열 추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6> 강원도 도시재생 교육·홍보 관련 업무 추진현황



- 도시재생 뉴딜교육은 지역주민, 상인, 활동가, 센터 근무자 등 교육 대상이 다양하고 전문지식의 함양정도가 상이하여 맞춤형 단계별 교육이 효과적임
- 단계별 맞춤형 교육은 커리큘럼 구성과 수강생 확보 등, 기획에서 홍보, 수강생 모집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간 연기된 교육과정을 하반기에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춘천 11회, 원주 8회, 강릉 25회, 동해 4회, 태백 8회, 삼척 3회, 홍천 3회, 횡성 9회, 영월 2회, 정선 1회, 철원 3회, 인제 1회, 양양 1회 등

4. 포스트코로나와 강원도 도시재생 시사점

1) 강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정 검토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는 사업 집행률에 따라 패널티 및 인센티브가 부여되므로,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도 내 시·군의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업 집행이 불가피함

-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고 도시재생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집행 지수 목표치 및 세부사업 착·준공 시기 조정 등, 정부와 도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강원도 내 도시재생기초·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운영계획 변경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도시 활력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 구상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사업지역 내 인구 유동성 부족, 관광지 휴관, 각종 행사 취소는 도시 활력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 문화의 거리, 맛집 거리의 방문객 감소는 사업지 내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 쇼핑·배송, 비접촉식 결제 등 스마트도시재생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 및 노인 일자리 상실, 대면 및 타인과의 접촉 기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 및 사회단체, 기관 간의 협약, 사회적 자본 육성, 교육 훈련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 구축 마련이 시급함

3) 포스트코로나 시대, 장기적 관점에서의 강원도 도시재생 대응책 마련

- 비대면 접촉과 외출자체 등의 방역조치에 대응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긴급회의 및 추진상황 점검, 도시재생 거버넌스·교육·홍보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이 필요함

- 비대면·온라인 향유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일반화 될 것을 대비하여 정보약자를 중심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도시재생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인파가 몰리는 넓은 도시보다 한산한 로컬지역이 재조명되고 있는 시점[6]에서, 강원도 지역특성과 문화가 반영된 사업 추진·홍보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함

4)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강원도 도시재생의 집중적 투자분야 구상

-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등을 위해 국가단위프로젝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 투자 및 정책 추진계획을 제시함

-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 등이 초래되고 있으나,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선도를 위한 방안이 제시됨

- 지역사회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강원도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적 분야를 선정하고, 투자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요구됨

- 나아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영역과 연계될 수 있는 "강원도판 도시재생 뉴딜"로의 전환과 포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정책브리프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후 내용이 일부 보완·수정될 수 있습니다.

6)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여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높았던 2월~4월에 국내여행을 경험한 사람은 22.5%이며, 그 중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여행 횟수를 줄였다는 사람이 95.5%, 인파가 적은 지역 위주로 여행했다는 사람이 58.4%를 차지하였음, 또한, 전체 설문 응답자 중 45.8%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국내여행을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음(KCTI-INFO 제137호)